2026 - 8호
(2026. 10월 다섯째 주)

정책동향

- 국정 동향
- 시정 동향
- 타 시·도 동향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

목 차

Ⅰ. 국정 동향 ····· 1

1【국 방 부】광주 군공항 이전, 미국과 예비공항 활용 협의 추진 ····· 1

2【기후에너지환경부】송전망 주변마을 '햇빛소득' 지원 확대 ····· 2

3【행정안전부】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'지방우대지수' 도입 ··· 4

4【농림축산식품부】성환종축장 함평 이전 가시화...2030년 준공 목표 ····· 5

Ⅱ. 시정 동향 ····· 6

1【농축산식품국】전남광주, 농축산식품 수출 8억 4천만 달러 돌파 ····· 6

2【통합교통국】전남광주, 광주권 시내버스 9년 만에 전면 개편 ····· 7

3【시민주권본부】전남광주, 시민 정책참여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··· 8

Ⅲ. 타 시·도 동향 ····· 9

1【부 산 시】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...월 임대료 최대 100만 원 지원 ····· 9

2【대 전 시】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지역의료 협력체계 강화 ····· 10

3【경 기 도】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전환...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····· 11

국 정 동 향

1 광주 군공항 이전, 미국과 예비공항 활용 협의 추진

-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국 측과 예비공항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,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한미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.

- 강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**광주 군공항의 양륙공항 기능을 다른 예비공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**이라고 설명함. 다만 대체 예비공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, 미국 측과의 구체적인 협의 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.

- **광주 군공항**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, 군수물자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양륙공항이자 평시 한미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기지임. 기지 내에는 **주한미군지위협정(SOFA)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한 부지가 있어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필요**한 상황임.

-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, 공군은 관련 일정의 단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음. 다만 **미국 측과의 기지 이전 협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것**으로 알려짐.

- 강 장관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뿐 아니라 고위급에서 결정하는 톱다운(Top-down) 방식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, 해당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설명함.
  한편 **광주기지 내 미군 시설에서는 올해에도 582억 원 규모의 시설보강 공사가 진행**되고 있음.

- 공군은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**T-50 고등훈련기 운용 비행교육대대 2개를 예천기지로, TA-50 경공격기 운용 전투비행대대 1개를 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하는 임시배치 계획을 발표**함. 당초 2028년 중순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, 정부는 이전 일정 단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음.

2 송전망 주변마을 '햇빛소득' 지원 확대…입지선정 주민참여 강화

- **기후에너지환경부는**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전력망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해 **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 하위법령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고시 개정안**을 마련하고, 10월 22일부터 **12월 1일까지 입법예고** 함.

-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**「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」의 후속 조치**로, **송전망 주변마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고,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**하는 데 중점을 둠.

- **국가기간 전력망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(가공선로 1㎞당 20억 원)의 3분의 2 이내를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**하고, 해당 **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**해 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.

- 또한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참여 의향과 부지·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'계통햇빛소득마을' 선도사업을 발굴하고,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 검토, 사업 구상 및 주민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임.

- **송전망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**를 위해 **주민설명회**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**확대**하고, **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**하며, 회의 **의결사항**과 **자료를 공개**하도록 개선함. 아울러 후보 입지를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비교·검토하고,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
- 이와 함께 **기존 송전철탑의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**하고, **동일 시군구에 여러 송·변전설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 또는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**함. 정부는 입법·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.

3 행정안전부,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'지방우대지수' 도입

-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기 등을 고려해 **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'지방우대지수'를 처음 도입**함. 이를 위해 10월 20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, 21일부터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함.

- **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, 지역의 사회·경제적 발전 수준,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**임. 지방시대위원회의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·군·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며, 우대 필요성이 낮은 1권역 58곳부터 높은 4권역 61곳까지 차등 분류함.

- **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할 계획**임. 대표적으로 **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1권역 3%, 2권역 6%, 3권역 8%, 4권역 9%로 차등 적용할 예정**이며, 향후 세제·규제·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.

〈 지방우대지수 지정 현황(전남광주) 〉

전남광주	1권역	2권역	3권역	4권역
27개	-	(5)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	(6) 목포시, 여수시, 순천시, 나주시, 광양시, 무안군	(16)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고흥군, 보성군, 화순군, 장흥군, 강진군, 해남군, 영암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
4 성환종축장 함평 이전 가시화…2030년 준공 목표

- 충남 천안에 위치한 **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(성환종축장)의 전남 함평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**됨. 관계기관은 이전 절차를 단축해 **2027년 착공,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**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.

- 축산자원개발부는 **국가 단위 가축개량을 총괄하는 연구기관**으로, **한우·젖소·돼지의 유전능력 평가와 우수 종축 선발, 품종 개량 및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** 등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연구를 수행**하고 있음.

- 이전 대상지는 **함평군 신광면·손불면 일원 약 589만㎡(178만평) 규모**로, 가축 사육시설과 연구시설, 시험포장·온실 등 총 103개 동을 갖춘 국가 축산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임.

- **국립축산과학원**은 **지난 9월 29일 함평군에 이전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제출**했으며, 관계기관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. 당초 2031년 하반기 준공 일정에서 2030년 상반기로 사업 완료 목표를 앞당겨 추진할 방침임.

- 이번 이전을 통해 국가 축산연구 기반 확충과 지역 축산업의 연구·기술 연계가 기대됨.

-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**편입 토지**에 대한 적정한 **감정평가**와 **축산농가 폐업 보상, 이주민 생계대책 등 해결해야** 할 과제가 남아있으며, 주민들은 마을 태양광 조성과 일자리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.

시 정 동 향

1 전남광주, 농수산식품 수출 8억 4천만 달러 돌파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올해 9월 말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**이 **8억 4,192만 달러**로, **전년 동기 대비 2.7% 증가**했다고 밝혔음.

- 분야별 수출액은 **수산물 4억 4,794만 달러(53.2%), 농산물 3억 1,849만 달러(37.8%), 축산물 6,866만 달러(8.2%), 임산물 666만 달러(0.8%) 순**이며, 전년 동기 대비 수산물 2.5%, 농산물 5.9%, 축산물 11.3% 증가함.

- 특히 **주류**는 5,846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.9%, **음료류**는 3,115만 달러로 33.0%, **커피조제품**은 2,218만 달러로 169.9% 증가하는 **등 가공식품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.**

- **최대 수출 품목**인 **김**은 3억 4,912만 달러로 **전체 수출액의 41.5%를 차지**했으며, **전국 김 수출액의 40.4%를 기록**함. 전복과 미역 수출액은 각각 2,820만 달러, 2,545만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74.2%, 70.1%를 차지함.

- **국가별**로는 **일본** 1억 5,759만 달러(18.7%), **미국** 1억 5,600만 달러(18.5%), **중국** 1억 3,862만 달러(16.5%) 순으로, **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3.7%를 차지**함. **시·군·구별**로는 **목포시** 1억 4,802만 달러, **광주 북구** 1억 3,833만 달러, **나주시** 9,672만 달러 순임.

2 전남광주, 광주권 시내버스 9년 만에 전면 개편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10월 31일부터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을 9년 만에 전면 개편**함. **별도 증차 없이 장거리·중복 노선을 조정**해 **전체 노선을 103개에서 115개로 확대**하고, **하루 운행횟수도 535회 늘릴 계획**임.

- 주요 개편 내용은 **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, 교통취약지역 노선 확대, 광역·급행 노선 확충** 등임. 이용 수요가 많은 6개 노선에 급행 운행 방식을 도입하고, **신용·용두동과 첨단3지구 등 19개 지역에 시내버스 운행 구간을 총 46.2㎞ 확대할 계획**임.

- 특히 **나주혁신도시와 화순 방면 광역·급행 노선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**해 인접 지역 간 교통 연계를 강화함. 변경 노선은 버스정보시스템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.

-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**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선 개편 상황실을 운영**함. 또한 **11~12월 교통카드 이용자료와 시민 의견을 분석해 혼잡구간과 이용 불편사항을 추가 조정**할 방침임.

- 이번 개편은 행정통합 이후 광주와 인접 시·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 향후 노선별 배차간격과 환승 불편, 교통취약지역 접근성 등을 점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.

3 전남광주, 시민 정책참여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광주 '광주온(ON)'과 전남 '소통人 전남'을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**함. 시민의 정책 제안부터 검토·반영·결과 공유까지 연계하는 통합 참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.

- 특별시는 지난 8월부터 전담팀(TF)을 운영하고 있으며, 10월 2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플랫폼 통합 방안과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을 논의함. 신규 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 개선 방식을 비교·검토함.

- 특히 **기존 4만 5천 명 규모의 시민정책참여단에 10만 명을 추가 확보해 14만 5천 명 규모로 확대**할 계획임. 참여 대상을 27개 시·군·구 전역으로 넓혀 **도시와 농어촌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**하고, **시민제안의 정책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류체계도 강화할 방침**임.

- 이번 통합은 **지역별로 분산된 시민 소통창구를 일원화**하고,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. 특별시는 **2027년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**임.

- 향후 시민참여 관련 조례 및 운영체계 정비, 플랫폼 구축·운영 예산의 적정성,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됨. 특히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**시민제안의 정책 반영률**과 **처리 결과를 공개**하는 등 **실질적인 참여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**으로 보임.

타 시 도 동 향

1 부산시, 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‥월 임대료 최대 100만 원 지원

- 부산시는 10월 26일 지역 상권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는 「**1만 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**」의 **2차 참여자를 모집**한다고 밝혔음.

- 이번 사업은 **장기간 비어 있는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활용**하고, 초기 창업자의 **임대료와 시설 조성 부담을 완화**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됨.

- 지원 대상 지역은 부산대자율상권, 유엔남구대학로자율상권, 동래시장, 봉래시장, 서동미로시장 등 기존 지역과 하단자율상권, 덕천젊음의거리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함.

-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**초기 4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100만 원**과 **점포당 인테리어 비용 최대 400만 원을 지원**하며, **임차인은 월 최소 1만 원을 부담**함.

-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와 재창업을 준비하는 **소상공인**, 점포 이전·확장을 계획하는 기**존 사업자 등**이며, 참여 희망자는 11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.

- 부산시는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통해 상권 내 유휴공간을 줄이고, 신규 창업과 소비 유입을 촉진해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.

2 대전시,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지역의료 협력체계 강화

- 대전시는 10월 26일 호텔 ICC에서 **「대전형 필수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포럼」을 개최**하고,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는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함.

- 이번 포럼은 **보건복지부와 대전시가 공동 주최**하고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했으며, **지역 의료기관과 의사회, 보건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**함.

- 포럼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, 지역 공공보건의료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**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**하고 **의료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**함.

- 대전시는 **지난 9월부터 응급환자 이송·수용 지침을 시행**하고,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통해 **응급환자 병원 선정 시간을 평균 15분에서 2029년까지 1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**임.

- 이를 위해 **2027년 필수의료 사업비 170억 8천만 원(국비 119억 6천만 원, 시비 51억 2천만 원) 편성을 추진**하고, 중증응급 배후진료 82억 원, 야간·휴일·소아 진료 29억 원, 정신응급 대응 21억 4천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임. 또한 **2030년 준공을 목표로 319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건립을 추진**함.

3 경기도,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전환‥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

- 경기도는 10월 26일 **과수화상병 확산 방지**를 위해 기존의 발생 후 대응 방식에서 **사전 예방 중심으로 방제체계를 전환**한다고 밝혔음.

-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농가 신고를 받아 감염 나무를 매몰하거나 발생 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, 앞으로는 **병원균을 조기에 발견**해 확산을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임.

- 이를 위해 **겨울철 궤양 제거**와 첨단 진단기술을 활용한 조기 진단 등 과수화상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**선제적 예찰·방제 활동을 확대**할 방침임.

- 경기도는 민·관 전문가와 도 및 시·군 병해충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**현장 예찰 강화 세미나를 개최**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함.

- 특히 병원균의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, 농가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임.

- 경기도는 2027년 과수화상병 예찰·방제 지침 개정과 손실보상 절차 개선 등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하고, 선제적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임.